

발행처/(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교육2호관 502호 교육연구소

E-mail/ ier@kangwon.ac.kr 발행인/박주병 주간/김은영 부주간/박찬수

Vol. 12

2022년

1월15일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육정책 기획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운영 원리이야기



KNU
강원대학교

Contents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운영 원리 이야기



교육활동의 가치

공공성 / 공평성 / 수월성 / 공정성



교육운영의 원리

책임성 / 합리성 / 행위의 합리성과 합리주의
/ 효과성-효율성-효용성 / 자율성



미래교육의 방향

학생주도성 / 지속가능성 / 교육의 예술적 측면(I, II)



교육연구소 행사

해외신진연구자 초청 세미나 개최



교육연구소 알림

2022 미래교육포럼 개최 : "미래교육, 학교공간, 그리고 교육재정전망"

연구석좌교수특강 : "성인교육40:교육의위기와중년의위기극복전략"

[2021 알쓸교원 모음]

교육정책 기획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운영 원리이야기



필자 중 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새벽 4시쯤이면 눈이 떠진다. 그래서 새벽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원칙일 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내 아이에게 왜 아침에 일어나지 않느냐면서 혼을 낸다면 아이는 아빠가 왜 그러냐 어이없어 할 것이다. 아침잠이 많은 아이에게는 차라리 밤늦게까지 자기 시간을 쓰고 폭자는 것이 하루를 효율적으로 쓰는 원칙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내 습관, 경험, 취향이 반영된 원칙을, 칸트는 준칙(maxim)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내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원칙이긴 하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편적으로 권유하고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준칙이 원리(principle)가 되려면 합리적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 황금률이라고 하는 "己所不欲 勿施於人"(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논어〉 위령공)이라거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성경〉 누가복음)은 원리의 보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지역 & 교육협력〉 웹진이 처음 발간된 6월 15일자 "교육책무성"을 시작으로 필자들이 번갈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의 원리'를 집필했다. 이 특집호에 실린 것처럼 총 13개의 글에는 교육활동이 공평성, 수월성과 같이 지향해야 할 전통적인 가치를 논의한 것도 있고, 책무성, 효과성, 자율성과 같이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원리도 있으며, 학생주도성, 지속가능성과 같이 최근 교육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된 개념을 소개한 것도 있다. 알아두면 쓸데 있다고 논제를 달긴 했으나, 어쩌면 원리란 우리가 심각하게 추구하는 활동을 새삼 이해하는 데에 쓰이고, 쟁점이 생겼을 때 그 쟁점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쓰이고, 의사결정과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에, 이미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글들이, 교육이라는 배가 그때그때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바닥짐이 되기를 기원한다.

남수정, 박주병

공공성(Publicness)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존 듀이는 "공공성을 찾아서"(Dewey, 1915/2014:12)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나누는 근원을 이렇게 제시한다. "인간 활동의 결과에는 직접적인 교류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전자가 사적인 것에 반해 후자는 공적인 것이 되고, 후자의 결과들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공공성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은 교육에서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데에 나름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바깥에서의" 공공성 담론은 그대로 교육장면에 이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8세기 아나키스트들은 당시 막 싹트기 시작한 공교육제도, 국민교육 이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 취향을 가꾸고 내가 느끼는 일은 본래 개인적인 일인데(이것을 일본학자 우메네 사토루는 사사성私事性이라고 명명한다) 내 머릿속에 무엇을 채울지를 국가가 정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지는 개인의 자유이겠으나, 그 채워지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은 결코 자기만의 것으로(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식이든 넓게 보아 경험이든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inte r homines)에서 의미가 주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적 특성이나 교육의 공적 특성을 가리켜 일부 학자들(나병현, 2002 등)은 "규범적 차원의 공공성"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에서 공공성(publicness)은 이러한 공적 특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의 공공성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이선향, 2005: 10), 국가 사무로 운영되는 공교육의 원리를 결정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교육의 공공성은 어떤 실천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공적 개입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의무교육단계에서는 근대 공교육 제도가 기회의 평등, 나아가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놓고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정부의 규제 정책 사이에서의 갈등때문에 공공성의 범위를 놓고 격론이 진행 중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시장의 재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국가의 관여를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입장도 있다.

어느 입장에 서든 다음의 세 가지 공공성 이론의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이하, 이진권 2021 참조). 초기의 공공성 탐구는 조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조직이 정부의 소유인가, 개인의 소유인가에 따른 구분이었다. 이것을 소유권적 공공성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민영화된 국영조직,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나타나는 등, 조직이 공/사로 양분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규제적 공공성론으로 이행한다. 규제적 공공성론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공공성이론은 공적 영역의 통제가 곧 규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는 데 반해서 최근의 규범적 공공성론은 "왜, 무엇을 위해 공적 영역을 통제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Bozeman, 2007). 그래서 이 공공성 이론에서는 공공가치의 달성과 공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이 된다.

교육은 어느 시대에도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 데 비해 제대로 대처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의 공공성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교육의 공적 가치, 교육이 가져올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우리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Publicness

참고문헌

- Dewey, J.(1915). 정창호, 이유선 역(2014). 공공성과 그 문제들. 한국문화사.
 Arendt, H.(1958). 이진우 역(2017). 인간의 조건. 한길사.
 Bozeman, B.(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Gergetown University Press.
 나병현(2002).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549-571.
 이진권(2021). 대학의 공공성 담론 및 효율성 분석.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공평성(Equity)

남수경(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 소장)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교육제도로 구현하는 기본원리가 바로 공평성(equity)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평성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평등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달 역사와 함께 초기에는 자유사상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가 팽배했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간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평등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적 성격을 띤 교육 분야의 경우 특히 평등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평성은 교육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평성의 개념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형평성이라는 용어 외에도, 평등성, 균등성, 공정성 등의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다. 공평성과 형평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정책의 핵심 가치로 다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에서는 공평성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정책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용어가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공평성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OECD에서 제시하는 교육제도의 기본원리로서 공평성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로서 공평성을 중심으로 공평성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OECD에서 제시한 교육제도의 운영 기준으로서 공평성

접근의 공평성 (기회의 공평성)	특정 수준의 교육제도에 진학하는 데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보다 세부적으로, 첫째,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과, 둘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포함함.
학습환경의 공평성 (수단의 형평성)	개개인 모두가 동등한 학습 여건을 누리고 있는가? 즉, 교직원의 교육 수준,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접근방법의 양과 질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처지의 학생이나 집단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학생이나 집단과 동등한 학습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산출물(결과)의 공평성	교육활동의 결과 학업성취도 또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교육 결과 활용의 공평성	교육제도를 떠난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데 같은 기회를 가지는가?

■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로서 자원 배분의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horizontal equity)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교육비가 같은 수준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
수직적 공정성 (vertical equity)	다른 것을 의미있게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 일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와 특수학급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각각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원하는 것)
재정적 중립성 (fiscal neutrality)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비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나 지역의 부 또는 재정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예, 재산세가 높은 부유한 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원의 수준이 더욱 높거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더 높은 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
재정적 적절성 (fiscal adequacy)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적정 수준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금액이 충분한가? (예, 수평적 공정성(전국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동일 수준 유지)과 수직적 공정성(학교 급별로 학생당 교육비에 차이 유지)이 의미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

■ 공정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수월성(excellence)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성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 재력, 재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평등성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교육적 능력 이외 배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교육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 1원리가 바로 공정성이다. 그런데 관건은 다른 것을 얼마나 의미있게 다르게 대우할 것인가를 교육제도에서 실현하는 데 있다. 평등의 원칙에 의미있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바로 공정성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 선택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에서 공적인 개입을 논의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은 서로 상충되는 제도의 운영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대 이익(효과)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희소자원을 투입하는 것(내적 효율성)으로 해석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나 소득 분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원리가 상충적이라고 말하는 근간에는 효율성을 교육제도에 적용할 때 ‘수월성(excellence)에 대한 우선 투자’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제도에서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즉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 즉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 원리를 투입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전도유망한 학생이 고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추천 논문 : 김영철(1993). 공정성 기준의 재음미: 교육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0, 43-60.

수월성(Excellence)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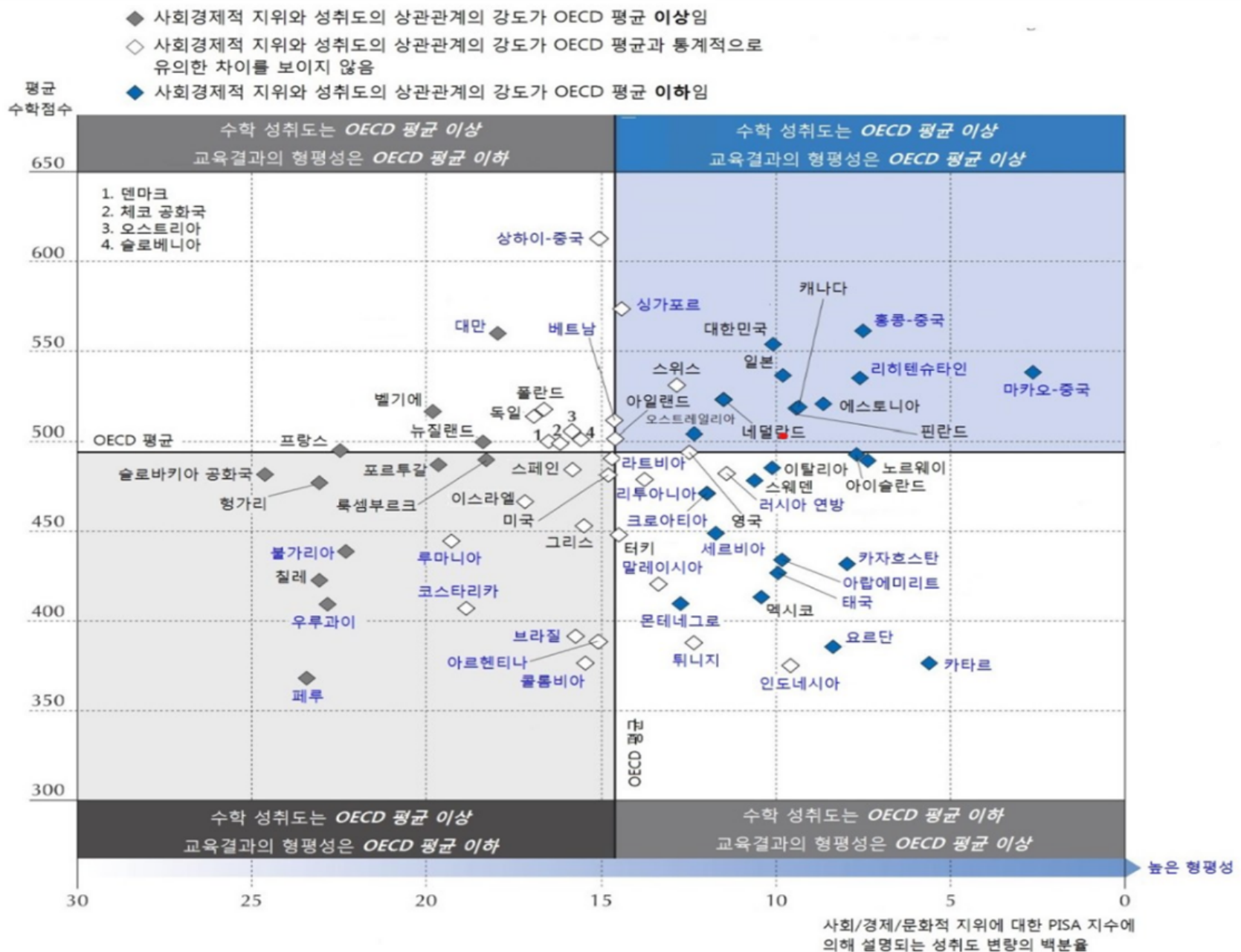
"학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고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학교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 것"

수월성은 영어 excellence의 번역어로서 우리말에 본래 없었던 새로운 말이다. 1983년 레이건 정부의 교육 수월성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가 내어놓은 보고서, <위기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박영숙, 2010). 이 보고서에서 수월성은 "학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고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학교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 것"(p.14)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교육의 질이 매우 저하되었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초필수교과의 선정, 능력별 학급 편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91년 부시 정부에서 발의된 AMERICA 2000 Excellence in Education Act(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94년 클린턴 정부의 Goal 2000: Educate America ACT, 2002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의 No Child Left Behind ACT를 거쳐 진행되었다. 크게 교육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검사 실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 학교에 대한 장려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호에서 공평성(equity)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수월성이 주로 평등성과 대립되는 가치처럼 보인다. 학교 선택이나 교과 선택 등과 관련하여 수월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월한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의 설치, 평준화 정책의 확대 등, 중등학교의 다양성을 놓고 치열하게 평등성-수월성의 대립구도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과연 수월성은 평등과 대립되는가? 아래 도표는 PISA 2012에서 수학점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평균이하일 뿐만 아니라, 2) 수학성취도도 높고, 3) 형평성(equity, 학생들간의 점수 편차가 낮은 정도)도 높은 사사분면에 속해 있다(그 이전의 PISA 2006년에도 한국의 위치는 성취도 평균 이상, 형평성 평균이상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음). 물론 이 도표는 기술적(descriptive) 측면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생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뿐, 처방적(prescriptive) 측면에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려 할 때 수월성을 택할수록 형평성이 낮아지거나, 형평성을 위해서 수월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처방적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수월성과 형평성은 서로 겨냥하는 가치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도표 1.4 학생의 성취도와 형평성



수월성은 교육의 달성 기준, 즉 목표 차원의 가치인 데 반해서, 형평성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절차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이다(한혜정, 2008). 평등이나 형평성을 위한 실제적, 방법적 조치를 강구할 때, 모든 종류의 교육적 경험을 양적으로 똑같이, 즉 같은 기간의 교육을 모두에게 같은 수준(동일한 내용과 방법, 여건)으로 제공하는 획일적인 평등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집단의 존재, 사람들 간의 차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의 결과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도 nonsense이다. "평등은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평범함', '범속함'과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등교육이 수월성 교육의 개념에 대립되는 것일 수 없다."(이돈희, 1999: 352).

피터스가 말했듯이(Peters, 이홍우 역, 2003: 178), 교육에 관련된 도덕적 쟁점은 평등 이외에도 자유나 질 높은 삶의 영위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각 원리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 수월성은 교육이라는 활동에 붙박혀 있는 가치이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목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 excellence는 고대 그리스어 arete를 옮긴 말이다. 아레테는 virtue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속에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우주의 각 존재는 저마다의 존재이유,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구현하도록 자신이 가진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하는 상태가 아레테이다.

그래서 아레테(excellence)는 행동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습관과 훈련의 결과로 가지게 된 품성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행복을 뜻하는 단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happiness)가, ‘잘(well)’을 의미하는 ‘에우(eu)’와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daim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에서 보여줄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행복한 삶은, 갑자기 닥친 행운이나 신의 은총덕분이 아니라, 품성으로서의 아레테 덕분에 좋은 삶이었다(Aristotle, 이창우 외 역, 2008: 545-8). 다시 말하지만 교육에서 수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교 우위의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엘리트주의를 연상하거나, 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실적지상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관점에서의 수월성은 상대적 비교에 의해 특정 집단만이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수월성일 뿐이다. 교육의 개념에 불박한 수월성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편자이자 개성을 갖춘 특수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Excellence



“Excellence is an art won by training and habituation: we not act rightly because we have virtue or excellence, but rather have these because we have acted rightly; these virtues are formed in man by doing his actions; we are we repeatedly do.

Excellence,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 Will Durant, *The Story of Philosophy* (1926)



참고문헌

- 김인희, 이혜진(2016). 한국 교육에서 수월성의 의미와 실현 조건 탐색. 교육정책연구, 3, 39-81.
 이돈희(1999). 교육정의론. 파주: 교육과학사.
 한혜정(2008). 수월성의 교육적 의미. 교육학연구, 46(4), 187-206.
 Aristotle, 이창우 외 역(2008). 니코마코스 윤리학. 파주: 이제이북스.
 Peters, R. S. 이흥우 역(2003). 윤리학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Schleicher, A. Equity, Excellence and Inclusiveness in Education,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214033-en.pdf?expires=1627182349&id=id&accname=guest&checksum=94D0CCDDEF294959F86A8F4F392B5144> 에서 2021. 7. 20 인출).
 Th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https://edreform.com/wp-content/uploads/2013/02/A_Nation_At_Risk_1983.pdf 에서 2021. 7. 22 인출).

공정성(Fairness)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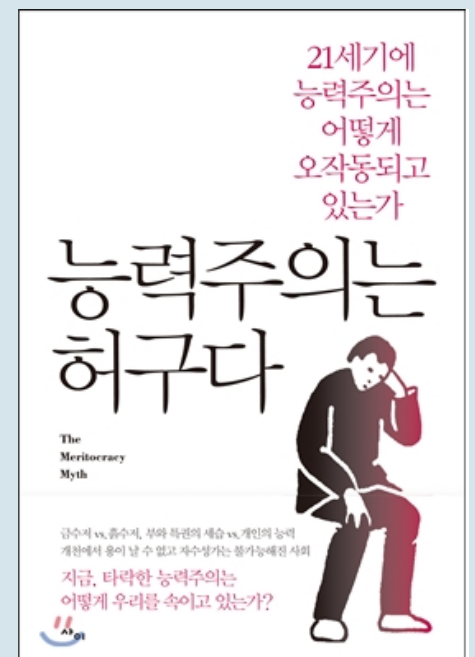
발달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윌리엄 데이먼(William Damon)은 젊은 시절의 연구(1975, 1977, 1980)에서 자원을 나누고 할당해주는 4세~8세의 아동의 사회적 추론을 다음과 같은 발달단계로 제시한다.

0-A	정당화와는 거리가 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근거로 선택(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 꺼)
0-B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근거로 선택하지만,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외적인 기준(크기, 성별, 외형 등)으로 정당화하며 선택(나는 여자니까 내가 더 많이)
1-A	개인의 다양성과 주관적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 평등에 기초를 두고 결정(모두 똑같이 나눠)
1-B	행동의 호혜성에 입각해서 결정,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업적과 응보의 개념이 출현
2-A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도덕적 상대성을 인식하며 가난한 사람과 같이 특별한 필요와 양적인 절충의 가능성을 인정
2-B	도덕적 선택이 확고하고 명확하지만, 정당화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고려하며, 평등과 호혜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사고

* 출처: Damon, 1980: 1011

모든 발달이론이 그렇겠지만, 이 단계들을 엄격하고 정형화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추론들이 여덟 살 무렵이면 열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심지어 20개월 영아들도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cf. Sloane Bailargeon & Premack, 2012). 그만큼 공정성은 아주 일찍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개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의 개념이 쉽고 명확한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같이 중립성이나 비편파성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공정한 거래”와 같이 독점이나 담합에 의한 시장지배, 또는 상식을 벗어나는 계약 등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주고받는 호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의 장면에서는 “입시제도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 “선발의 공정성”과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한정된 교육기회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주로 공정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 또는 그런 배분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 그리고 그런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나 주관자가 고수해야 할 원칙을 가리키기도 한다.



공정성이 언급되는 맥락이 다양하긴 해도, 공정성의 개념은 대체로 "부당한 ~", "불공정한 ~"과 같이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이를 회복하려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교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등장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이 받는 특권이나 수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납득하기 어려운 편견이나 관행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강요되는 의무 등등... 부당성, 불공정성에 대한 항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체구나 허기나 기호와 관계없이 같은 식사를 같은 양으로 배급해야 한다면,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에도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평등을 취급하는 실제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든, 천재적 재능을 가진 아이든, 모든 아동들은 아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취급받아야 한다. “범주내 평등”에 의하면 결국 규칙은 규칙이며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터스의 말대로 인격 존중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리에는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도 특별한 경우를 일일이 고려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취급되기를 요구할 수 없다.”(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2003: 146). 오히려 정당화가 필요한 것은 “범주간 평등”이다. 사람들을 상이한 범주에 배치할 때, 즉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할 때에는 이러한 차별대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유명한 존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함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차등의 원칙”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평등주의(Rawls, 황경식 역, 1977: 95)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전적 자연법이론과 사회계약론의 취지로 되돌아가서, 도덕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놓고 사고실험을 한다.



[그림 2] 존 롤스(J. Rawls)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Hobbes, <리바이어던>, Ch. 13), 로크의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Locke, <통치론-속편>, 4절)로서 그려진 '자연상태'(natural state)는, 원시림에서 발견되는 미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상가가 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정치권력, 사유재산의 보호)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설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루소가 무너뜨린 것처럼, 인류는 어떤 필요,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사회라는 도구를 성립시키는 사회계약에 합의했던 것이 아니다. 사회는 우연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사회계약은 늘 새롭게 정당하게 다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 롤스는 이렇게 새롭게 쓰여지는 계약이 (정당한 이유없는) 임의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원칙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끔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있다고 가정한다."

(Rawls, 황경식 역, 1977: 155).

예컨대 카스트제도 같은 신분제도는 특정 가문에서의 출생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의 배분에 쓰이는 것이다. 봉건제도가 무너진 후 대다수의 사회에서 자본을 인정하고 자유시장을 옹호하지만, 모든 자원을 자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배분하지 않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모의 자산에 힘입은 사람들의 승승장구를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다.

심지어 샌델의 평가에 의하면(Sandel, 이창신 역, 2010: 214-31),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만으로도 사회적 우연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재능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롤스의 주장이 맞다면 그 주장은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p.223). 롤스가 보기에 재능과 심지어 노력까지도 사회적 우연의 요소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 사람들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하는 데 합의한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Rawls, 황경식 역, 1977: 121-2). 즉 재능있는 사람을 격려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이익은 "사회에 불리한 자의 복지에 대해 기여하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업적주의(meritocracy)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 만한 자격(재능과 업적)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증진하도록 만들어진 기본 구조" 안에서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더 나은 대접(입학기회의 제공, 더 나은 임금, 그리고 권력 등)을 받는 것이다.

공정성을 도덕적 자격의 문제에서 분리하는 롤스, 그리고 롤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선의 관점에서 분배 정의를 이야기하는 샌델의 입장은, 오늘날 능력주의를 하나의 신념처럼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롤스의 논의는 공정성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생학적 조치가 그려지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선천적인 요소에 의한 차이를 무효화할 방안은 없다. 선천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들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남아있는 한, 그 차이가 계기가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대우가 있기 마련이다. 남녀의 구분이 그럴 수 있고, 기호와 재능과 적성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어떤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는 환경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가 정당한 것이 되도록,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공정성은 이러한 실제적, 실천적 사고를 이끄는 개념이다.



[그림 3] 박원익, 조윤호(2019). 공정하지 않다

참고문헌

- Damon, W.(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1010-1017.
 Peters, R. S. 이홍우 역(2003). 윤리학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Rawls, J. 황경식 역(1977).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Sandel, M.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책무성(Accountability)

남수경(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 소장)

공공부문에서 책무성 개념은 분석적 개념이기보다는, 규범적, 포괄적, 가치지향적 개념과 행정개혁,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수사적 이미지로 다루어지는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교육에서 책무성의 개념이 강조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공적 재정지원의 투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운영기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무로서 책무성을 묻는 경향이 있다.

광의에서 보면 책무성은 규범적·가치지향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협의에서 보면 책무성은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Bovens(2010)는 책무성의 개념을 ‘미덕으로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 as a virtue)’과 ‘기제로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 as a mechanism)’ 두 가지로 구분하되, 협의의 개념에서 책무성은 후자, 즉 기제로서의 책무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미덕으로서의 책무성’은, 공공 행위자들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으로서 주로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미덕으로서의 책무성은 정치적 담론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투명성과 신뢰성, 합법성 등의 용어와 관련된다.

■ ‘기제로서의 책무성’은, 보다 협의의 기술적 의미(descriptive sense)로 사용된다. 공공 행위자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보다 책무성 논의의 초점을 둔다. 그리고 책무성을 평가와 연계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제로서의 책무성은 책무성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역사적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부기라는 의미에서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Dubnick, 2007을 인용한 Bovens, 2010: 950-951에서 재인용). 이는 윌리엄 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왕의 영토와 관련하여, 지주들은 모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재산 소유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책임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기꺼이 지킬 수 있고 고수할 수 있는 자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왕이 인정한 것이다. ‘정당화하다(giving an account)’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권자와 주체, 주체, 대리인, 또는 포럼과 행위자의 관계가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어원적, 역사적 뿌리에 근접한 책무성은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수반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또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토론 가능성, 포럼의 질문과 행위자의 답변, 포럼에 의한 행위자의 판단도 포함된다. 또한 판정, 부적절한 행위나 적절한 수행에 대한 보상은, 행위자에 대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제재의 부과를 의미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책무성은 ‘행위자와 포럼의 관계를 기반으로, 행위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가 있으며, 포럼은 그 결과를 평가할 질문을 제시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행위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제’로 정의할 수 있다(Bovens, 2010: 951).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교육의 책무성에 적용해 본다면, 교육의 책무성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인이 타고난 잠재 역량을 개별 맞춤형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교육기관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合理性, Rationality)

“조직의 의사결정 원리로서 합리성”

남수경(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 소장)

“권력은 합리성과 합리화 간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리성은 결정을 하는 데 증거와 이성에 적용한다.
합리화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결정을 합리적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Hoy & Miskel, 2012)

■ 광의의 ‘합리성’ 의미와 사회과학에서 관심의 초점

넓은 의미에서 합리성은 논리(論理, logic) 또는 이성(理性, reason)에의 적합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정당한 근거 혹은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즉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이유를 수반하는 주장·판단·신념을 지칭한다. 이러한 의미의 합리성은 근거 혹은 이유의 이해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혹은 준거가 일정하지 않은 일종의 개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782-783).

한편 사회과학에서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종수, 2009: 540). 예컨대 “조직행동은 비합리적이고 권력은 종종 합리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Hoy & Miskel, 2012)와 같은 말 속에 담긴 합리성의 의미가 바로 대표적이다. 특히 조직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는 개념이 바로 합리성이다.

■ 실체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사이먼(Herbert A. Simon)은 합리성의 개념을 실체적(또는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실체적 합리성은 주어진 조건이나 제약조건에 의해 부과된 한계 안에서 주어진 목표의 성취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는 경우로서 ‘선택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절차적 합리성은 선택에 도달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과정)를 따르는 경우로서 ‘선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이먼은 인간의 문제해결능력보다 문제의 범위 내지 규모가 큰 경우 실체적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절차적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임의영, 2014: 13-14).

또한 만하임(K. Mannheim)은 합리성을 기능적 합리성(functional rationality)과 실체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능적 합리성이란 조직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태의 속성을 말하는 반면, 실체적 합리성이란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행태의 속성을 의미한다(이종수, 2009: 540).



목차

1. 생애

2. 제한적 합리성

- 의사결정
- 개관적/제한적 합리성
- 합리성 제한요인
- 제안
- 의외

3. 조직이론

- 조직 생리학
- 조직 해부학
- 의외

4. 인공지능

- 연구 계기
- 물리적 기호 시스템 가설
- 의외

[그림 1] Simon, H. A. Bounded Rationality

■ 완벽한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선택 혹은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실존조건에 있다. 어떤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으로서 도구적 이성인 목적지향적인 합리성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이란, 일관된 선호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알고 있으며,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알고, 자신의 선호체계에 따라 모든 결과들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벽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이성 외부의 요인으로서 ‘감정’과 이성 내부의 요인으로서 계산능력이나 정보처리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 즉, “합리성의 적은 감정이 아니라 무지이다”(Crowther-Heyck, 2005: 59를 인용한 임의영, 2014: 11에서 재인용).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원리로서 이와 같은 완벽한 합리성모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인간의 정보접근능력과 계산능력은 경험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 혹은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임의영, 2014: 8-9).

■ 경제적 합리성과 실체적 합리성의 제약요인

경제적 합리성이란 제한된 자원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관심, 즉 절차적 합리성보다는 행위자의 행태, 즉 실체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차이를 보인다.

기대효용의 극대화하는 인간 행태에 초점을 둔 경제적 합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실체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둔 이론들이 확률론, 게임이론, 합리적 기대이론 등이다. 예컨대 확률론은 불확실성을 확률개념으로 이해하고, 불확실성 하에서도 기대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임의영, 2014: 17).

■ 제한된 합리성의 기본 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실의 합리성은 제한된 합리성일 수밖에 없다.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불완전한 인간과 환경의 구조를 기본 요소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탐색이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적인 특성을 갖는다.

<표 1>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기본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인간의 특성 (합리지향성)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합리지향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지만, 인간의 인지구조와 당면한 환경의 복잡성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데 종종 실패한다.
환경의 구조 (복잡성)	합리적 행동은 인지구조와 환경의 복잡성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이나 계산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복잡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탐색과정 (절차적 합리성)	불확실성, 대안형성의 곤란성, 계산능력의 한계 등과 같은 합리성의 제약요인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탐색 과정을 이론적인 논의에 포함시키고, 대안선택의 기준을 최적수준에서 만족수준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적응 (adaptation)	개방체계(인간이든 조직이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계의 유지와 작동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흡수하고, 내부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출물을 환경에 내보낸다. 환경 역시 체계의 산출물에 반응하여 일정한 신호를 체계에 다시 보내게 된다. 이러한 투입, 산출,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체계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주 : (임의영, 2014: 11-16) 재구성.

■ 정책형성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합리성 모형

합리성 모형 혹은 합리적-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과 지식 및 정보의 가용성을 전제로 한 이론 모형이다. 즉, 정책 결정시 정책결정자가 제기된 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모형이다. 정책결정자의 전지전능함,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낙관적 모형이라고도 한다(김종철, 1989: 227).

그러나 전지전능함에 대한 전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합리성 또한 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각종 통계적·계량적 기법을 동원하고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보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 활동의 비계량적 측면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한계가 많다. 합리성 모형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된 정책형성 모형이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등이다(윤정일 외, 2021).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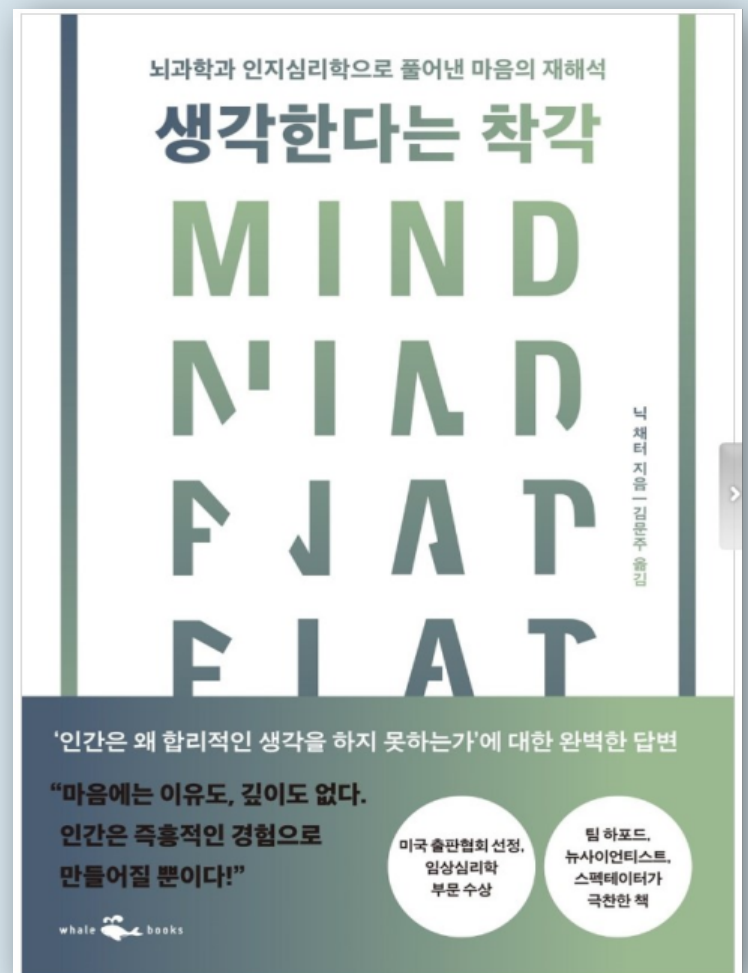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4). 「교육학용어사전(전정판)」. 서울: 하우. 윤정일, 송기창, 김병주, 남수경(2021). 「교육행정학원론(제7판)」. 서울: 학지사.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개정판)」. 고양: 대영문화사.
- 임의영(2014). 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학. 「행정논총」, 52(2), 1~35
- Hoy, W. K., & Miskel, C. G.(2012).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9th ed.).
- 오영재, 신현석, 양성관, 박종필, 가신현 역(2013). 교육행정: 이론, 연구, 실제. 아카데미프레스.

행위의 합리성과 합리주의(Rationalism)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지역과 교육협력' 제9호에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을 다루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기보다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합리지향적 존재로서 복잡한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인지심리학자 닉 채터(Nick Chater) 역시 「생각한다는 착각(The Mind is Flat)」에서 인간의 완전무결한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개 인간의 행동을, 개인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단한 것, 또는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끌어올려진, 소위 '깊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낳게 한 이유, 의도, 동기, 성격 등을 파헤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닉 채터에 의하면 “마음 속에 숨겨진 미리 형성된 신념과 욕망, 선호, 태도, 심지어 기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p.312). 인간의 자아는 “거침없고 매혹적인 즉흥시인”으로서 순간순간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신념, 욕망, 지성, 감정 등은 우리가 그때그때 자신을 주인공처럼 만들기 위해 들려주는 급조된 이야기의 요소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역사이며, 새로운 지각과 생각, 감정과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를 재배치하는 창조적인 기계”(p.313)이다. 사실 인류는 계몽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의 발전을 목도하면서 이성인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맛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란 매순간 문제나 필요의 연속이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우연적 조건들을 초월하는 이성적 사유와, 이 사유를 통해서 추출해낸 보편적 기법이 필요하다는 상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체의 우연적 조건을 걷어낸 '순수한'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분명 그것은 그 소유자에게 세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 현대 정치사상가인 마이클 오우크쇼트(Michael Oakeshott)는 이와 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지적 특징을 합리주의(rationalism)라는 명칭으로 비판한다.

* 하이에크(Hayek, F. A, 1899-1992)도 이런 신념을 '과학지상주의'[scientism;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가리킴]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합리주의자들은 인류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희망을 품기보다 명백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는 데에 야심을 품는다. 그리고 이런 야심은 그들의 지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에 기이할 정도로 심사숙고, 자기의식을 끌어들이고, 모든 수동적 면모를 배척하며, 활동의 리듬과 연속성을 제거하며, 결국에는 이성의 구사로써 헤쳐나가야 할 끊임없는 문제사태에 활동을 몰아넣는다(in Oakeshott, Rationalism and Politics).

얼핏 보면 합리주의가 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합리주의의 기법적 사고방식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그들은, 지금까지의 행위의 원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가능하면 제거하고 싶어한다. 그 자리에 행위를 낳을 힘을 가진 목적이나 이상을 새롭게 창안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효율적인 기법과 정책을 전파함으로써 개인의 행위를 조건화하고자 한다. 물론 개별적인 욕망추구에 몰두하는 개인들의 행위를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자들은 내 목적을 상대방이 공유하도록 ‘설득’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理想)을 ‘정당화’하는 일에 매달린다. 이제 권리, 정의, 인종적 순수성, 공동체의식, 평등한 분배 등 수많은 용어(‘이데올로기’)들이 보다 나은 세계를 약속하는 청사진과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보편적이고 더 완전한 이상은 모종의 ‘초월적 순수 이성’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끌어온다.

합리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채 추상과 요약만으로도 삶의 목적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역사적 전통 바깥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혁신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전통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해왔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간행위는, 기존의 습관과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지속되어 온 제도가 그 온전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보살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물론, 이 일은 어떤 변화도 거부한 채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그 속에는 반드시 그 사회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방향 지시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다양한 실제적 활동에서 제도를 보살피는 일을 가리켜 오우크쇼트는 “암시를 추구하는 일”(the pursuit of intimation)이라고 부른다. 위기상황마다 효력을 발휘하는 만병통치의 지침은 없으며, 위기일 때조차 우리는 행위전통의 파편, 흔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관점이 강력한 사회 변화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맥빠지고 비관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엉뚱한 데서 인간활동의 지침을 찾으려는 그릇된 희망,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서 성급하게 효과를 내려는 조급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그렇게 비관적일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일 뿐이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경계도 없고 바닥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정박할 항구도 없고 닻을 내릴 해상도 없으며, 떠나온 출항지도 없고 가야 할 목적지도 없다. 이 항해에서 항해사가 해야 하는 일은 수평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이 항해에서 바다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이기도 하다. 훌륭한 항해사는 전통적 행동방식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여 모든 적대적 세력을 친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in Oakeshott, Political Education).

합리주의의 폐해는 전통의 요약일 뿐인 이상이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개별적 행위를 조건화하겠다고 나서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공학적 사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인간의 삶을 조건화하려 든다. 이미 목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체의 전통을 걷어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 역시 새롭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들여서 하나의 비전(秘傳)만 완성할 수 있다면, 이제 갓 인간활동에 입문한 신참자들—요리사든, 정치가든, 심지어 교사든—이 일거에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리주의가 정치는 “책의 정치”가 된다. 비공식적 관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정치의 차선이 아닌 절대적 완전성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완전의 정치”이다. 얼핏 훌륭한 듯 보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모두 일반화해버리는 “획일의 정치”(즉 완전성이라는 획일적 조건을 인간행위에 부과하는 활동), 보존과 복구의 정치가 아니라 파괴의 정치이다.

* 합리주의 정치의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리센코(Trofim Lysenko, 1898-1977)가 초래한 대기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스탈린 집권하의 농생물학자로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다윈에게 헌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윈의 획득형질의 유전설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이에 따라 멘델의 유전자 개념을 부정하고, 획득형질의 유전이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주장한 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련 시베리아의 기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밀 재배를 시도하다가 결국 소련 농업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 대기근(1933) 이후 소련 농업은 그 여파로 1980년대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리주의의 폐해는 교육의 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도 그럴 것이, 합리주의의 오류는 인간의 지력, 지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마음이 활동이나 대상들에 선행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역으로 모종의 미리 고안된 ‘합리적’ 도식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놓고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마음이 이렇게 종립적으로 공평무사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때조차 마음에서 편견, 관습, 전통, 풍속과 같은 사항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책에 적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행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다. 이것은 ‘기법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지식’ 곧 ‘전통적 지식’으로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 그런 암묵적 차원의 지식을 반드시 포함시켜 사고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활동과 독립되어 있다고 잘못 가정하면, 교육은 이 백지상태같은 마음에 우월한 이상, 탁월한 기법 등으로 채워넣는 일로 오해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방법 역시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연마하고 그 결과로 문명의 유산을 향유하도록 하기보다, 책이나 통신강좌를 통해서 성공의 기법을 획득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책에 적힌 기법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일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책을 완전히 놓을 정도로 체화된 실천적 지식을 충실히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통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향수, 반동, 재건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현재를 뜯어고쳐 이미 사라진 과거—게다가 정태적인 모습으로 잘못 상상된 과거—의 상아래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관점이야말로 합리주의가 곡해한 전통의 의미이다. 전통은 오히려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해 온 전통에는 한 가지 원칙과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대 이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인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자격(지적인 능력과 정치적 성숙)의 요구보다 기본적 권리에의 요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여전히 판단능력을 근거로 불허하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은 하나의 이상이나 원리, 그리고 그에 이르는 단순한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위의 합리성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더듬어 다음 내딛어야 할 발자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실천적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에 관한 실제적 지식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 합리적이다.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서 합리적이거나 미리 무엇인가를 정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행위가 도덕적 정신과 공감의 흐름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화를 수립하고 부조화를 감지하는 구체적인 정신, 조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고 그 조화가 달성된 수준에 연관되어 있는 정신 ... 한 마디로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가 속한 관례에 적합한 현명함을 드러낼 때 합리적이다.(in Oakeshott, Rationalism in Politics).



마이클 오크쇼트(Michael Joseph Oakeshott)
(1901년 12월 11일 ~ 1990년 12월 19일)
©위키백과

참고문헌

- Chater, Nick.(2018). 김문주 역(2021). 생각한다는 착각. 서울: 웨일북.
Oakeshott, M.(1991). T. Fuller(ed.).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and expanded edition. Indianapolis: Liberty Press.
Oakeshott, M.(1989). T. Fuller(ed.).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The Yale University Press.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효용성(Utility)의 의미와 관계

남수경(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 소장)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결국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의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 교육 참여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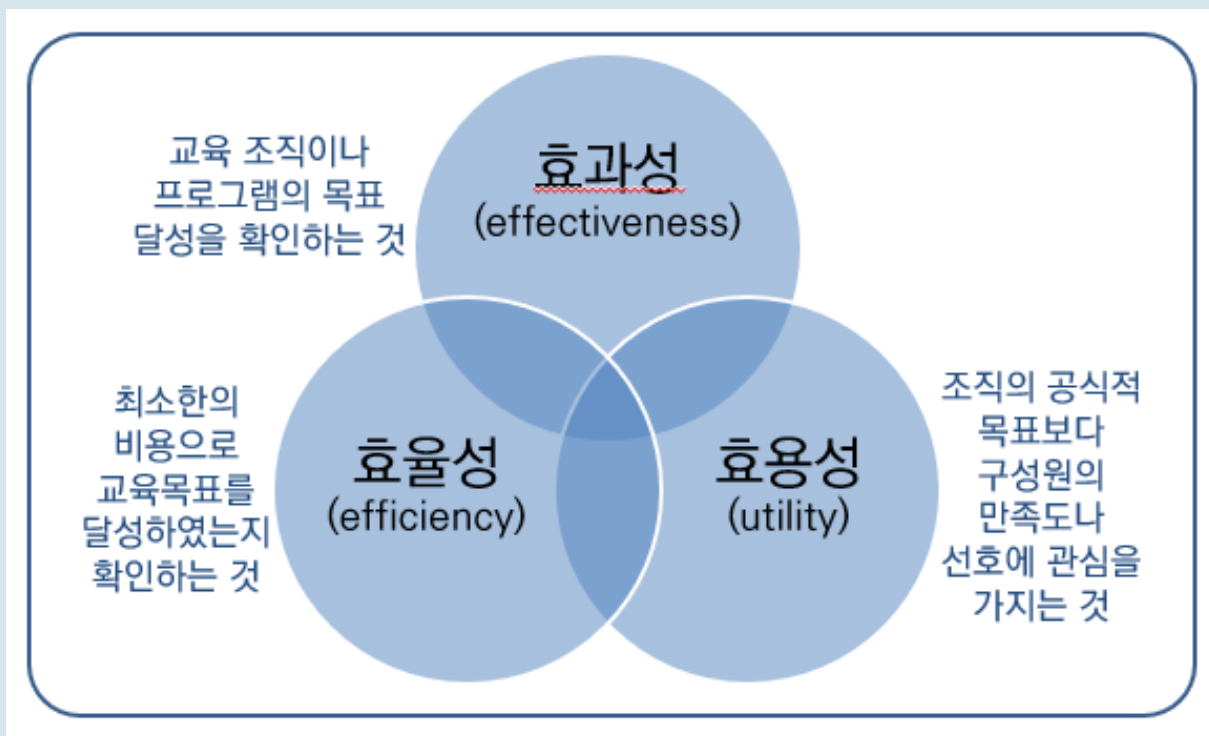


그림1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의 의미와 관계

■ 행정·평가론적 관점에서 ‘효과성’의 의미와 ‘효율성’과의 관계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효과성은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organization’으로 표기되어 있다. 효과성은 활동의 주체로서 ‘조직’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조직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87: 810). 또한 효과성이라는 용어는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 즉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기본 원리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학적 관점에서 효율성(efficiency)이란, 조직 차원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욕구가 충족된 정도’, 즉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 구분은 겐젤스(J. W. Getzels)와 구바(E. G. Guba)의 사회체제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행위를 기관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때 기관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족시키는 정도는 효과성으로, 개인의 인성에 따른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는 효율성으로 정리하였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87: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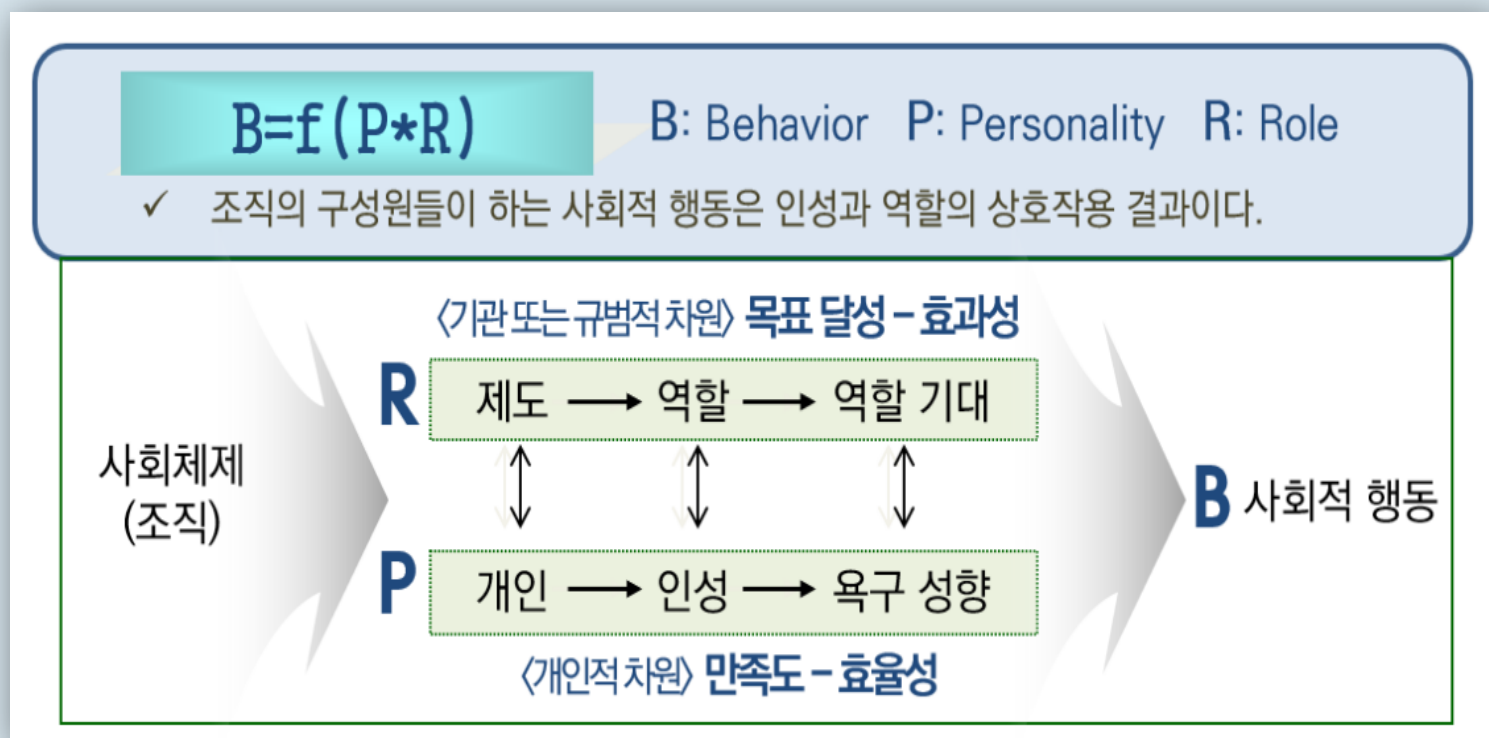


그림2 Getzels & Guba의 사회체제모형

■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의 의미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효율성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즉,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성 추구에 있다’고 할 때,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상태 또는 주어진 양을 생산할 때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의 효율성은 협의의 효율성으로 내적 효율성(internal efficiency)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교육에 적용되는 내적 효율성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현상을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파악하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효율성은 외적 효율성(external efficiency)을 의미하는데, 교육의 외적 효율성은 교육체제를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이 과부족 없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분야와 경제분야 간 협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한다. 교육의 외적 효율성은 교육과 생산성, 교육과 임금수준, 교육과 현직훈련, 교육과 고용의 안정성 문제 등과 같이 교육과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외적효율성은 좁게는 인력수급 정책에 국한시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넓게는 개인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연계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백일우, 2000).

■ 효율성 개념의 변화와 ‘효용성’의 의미

효율성은 개념적으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상 설명 방식과 그 범위에서 변화를 거쳐 왔다.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기 효율성의 개념에는 경제학적 의미, 즉 최소의 노력과 시간, 경비로 최대의 결과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40년대 이후 효율성은 경비보다 조직구성원의 만족감, 시민의 만족과 같은 다원적 이익, 조정의 절차 등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준거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효율성은 양적인 개념에서 질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주삼환, 1998: 27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학적 의미의 효율성이 평가준거로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계량화에 따른 측정의 편리성 때문이다.

한편 질적인 개념으로서 효율성은 효용성(utility)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효용성은 비교와 선택에 사용되는 주관적 선호도 내지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김남순, 2001: 262; 정태범, 2001: 285). 예를 들어 학습자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선호도와 필요, 심리적·환경적 상태가 선택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경우 효용성이 큰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의 관계

결국 효과성과 효율성, 효용성의 차이는 관심의 초점이 산출에 있느냐 과정에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평가준거로서 효과성은 조직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입이나 과정에서의 시간이나 노력, 자원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효용성은 얼마나 만족스럽게 달성되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반면 평가준거로서 효율성은 얼마의 노력과 시간, 자원을 들여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투입과 과정을 더 중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효과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고 할 때 ‘목표’가 지니는 ‘양면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효용성은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체제모형에서 효과성은 조직 그리고 조직 목적 내지 목표의 달성에 강조점이 실린 반면, 효율성과 효용성은 개인 그리고 개인적 동기의 만족에 비중이 실린 개념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런데 효과성이 목표 내지 목적에 대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목표’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공식적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개인의 ‘실질적 목표’, 즉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혹은 선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잠재력의 성취와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직 재교육이나 기업 교육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기술되고 교육내용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 목표가 곧 실질적 목표가 된다. 효과성의 평가는 결국 실질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실질적 목표, 즉 개인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등을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결국 만족스러운, 즉 효율성과 효용성이 큰 프로그램이 곧 목표가 달성된, 즉 효과성이 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남순(2001), 교육 비용-효용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백일우(2000), 교육경제학, 서울: 학지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87),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정태범(2001), 교육생산성,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주삼환(1998), 학교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 하우.

자율성(Autonomy)

남수경(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9월 10일(금)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 권고안의 핵심 가치는 한마디로 ‘학생 주도성과 단위학교 자율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생 주도성’은 「지역과 교육협력」제6호(2021. 8. 30.)의 알쓸교원 코너에 자세히 게재된 바 있다. 여기서는 ‘단위학교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autonomy)의 의미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광의의 자율성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자율성이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 칸트(I. Kant)는, 의지의 자율성은 의지 그 자체의 법칙을 의미하는 ‘정언적 명령(定言的 命令, categorical imperative)’에 따르는 것이며, 이성적 의지 밖에 있는 권위나 목적에 따르는 것을 타율성(heteronomy)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규범·규칙을 자신이 선택·결정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자유가 곧 자율성이다”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572).

이렇게 보면 학생 주도성이 추구하는 가치도 광의에서 보면 학생의 자기결정권, 즉 자율성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에서 추구하는 자율성은 보다 협의의 자율성으로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 출발은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토대가 되는 ‘단위학교 책임운영제(school-based management)’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위학교 책임운영은 곧 단위학교 의사결정의 자율성, 즉 학교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은 결국 ‘분권과 자치’의 개념과 만나게 된다. ‘분권이나 자치’는 그 영역에 따라 입법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조직의 자율성, 행정의 자율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제한적 수준 이기는 하지만 학교단위 입법이나 재정 관련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직이나 행정 관련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인데, 학교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 학교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자치 학교자치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 학생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학교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며,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 2021. 9. 10.)

2. 교육자치와 자주성,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그런데 교육에서 자치의 개념은 1991년부터 시행된 시·도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토대로 발전해 왔다. 이때 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원리를 토대로 실현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자주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교육이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교육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적정 수준의 권력 배분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주성의 개념에는 교육 영역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교육이 장기적이고 범국민적인 사업이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국가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윤정일 외, 2021). 교육의 자주성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도 광역 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육자치를 넘어서 ‘학교자치’를 논의하고 있다.

3. 단위학교 자율성의 과제

이제 교육의 자율성은 국가단위 운영의 보루였던 교육과정 운영의 자기결정권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학교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위학교 책임운영제를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율성과 책무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단위학교 의사결정 자율성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단위학교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역량, 즉 전문성의 강화와 협업이 중요하다. 교직원들은 자기개발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있는 교직원 협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부모 역시 연수 등을 기반으로 역량을 높이면서 우리 지역과 학교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왜 우리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는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학생 주도성’의 개념이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 선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며, 교육활동이 단위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 주도성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임과 동시에 단위학교 책임운영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원론적 차원의 가치로서 단위학교 자율성이, 학교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협업을 기반으로 실천적 차원의 가치로서 학교자치로 발전하고, 책임운영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2021. 9. 10. 보도자료).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시대 연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4). 「교육학용어사전(전정판)」. 서울: 하우.
 윤정일, 송기창, 김병주, 남수경(2021). 「교육행정학원론(제7판)」. 서울: 학지사.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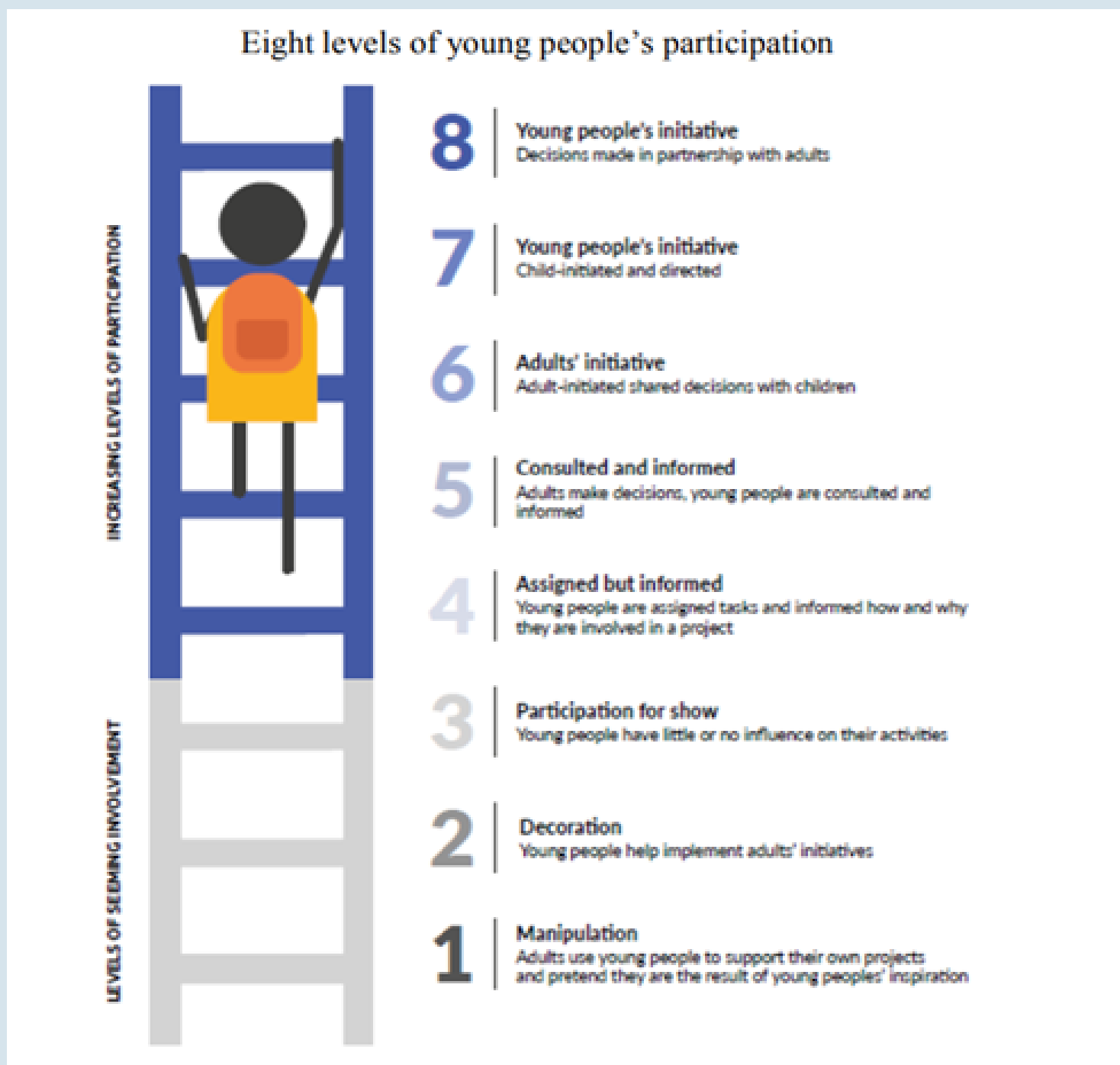
*Tell me and I forget, Teach me and I remember,
Involve me and I Learn **

* 영미권 사이트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로 소개된 이 문구는 사실 그와 아무 관계가 없고, <순자>의 문구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축약되고 변경된 것이다. <순자>의 '유효편'의 원문은 不聞不若聞之 聞之不若見之 見之不若知之 知之不若行之 - 듣지 못한 것은 들음만 못하며, 들은 것은 아는 것만 못하며 아는 것은 행함만 못하다.

'Student Agency'(이하 최근의 통상적인 번역을 따라서 '학생 주도성'<교육부, 2021>으로 옮기겠다.)는 2018년에 발간된 OECD 2030(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보고서의 핵심개념이다. 그 이전에 OECD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역량기반 교육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정치적, 상업적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국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했고 이에 OECD는 회원국의 읽기, 수리, 과학 부분의 국제비교조사(PISA, PIAAC)에 합의한다. 이 비교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유명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래사회 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을 3개 영역에서 9가지로 도출한 바 있다. 이후 회원국마다 핵심역량의 구성은 다소 상이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Competence-based Education)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대 핵심역량을 설정하였고, NCS기반의 전문직업 교육과 역량기반의 대학 교양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해 OECD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 주도성'은 "학생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가정 아래, "목표를 세우고 성찰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변화를 낳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et a goal, reflect and act responsibly to effect change)"으로 정의된다(OECD, 2018). 이 개념은 정체성의 발달과 소속감, 그리고 동기, 희망, 자기효능감 및 성장지각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OECD, 2019: 5).

이 정의를 중심으로 'Agency'는 '주도성' 또는 '주체성'으로 번역되곤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번역은 자칫 타자와의 관계없이 고립된 능동성을 떠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오우크쇼트에 따르면 Agency는 행위자를 행위자로서 성립시키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나아가 행위전통에 입문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용성에 더 크게 의존한다(Oakeshott, 1979). 가령 어떤 요리사의 요리하는 활동은, 요리재료를 선택하고 기구를 사용하고 요리를 요리로서 인식해온 요리의 실제, 요리의 행위 전통 안에서 비로소 요리가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요리하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가 불을 다루고, 재료를 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만 아니라, 그에 앞선 사람들이 인식하고 실행해온 요리라는 전통과, 지금 그가 요리를 사이에 두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열기설기 얹혀 있는 것이다. 행위자로서의 나는 맥락과 관계없이 시간상 먼저 주어지는 실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활동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OECD에서도 학생의 행위자성(Agency)을 설명하면서, Co-agency, 즉 다른 행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위자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Agency를 이해할 때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Agency는 행위,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학생이 스스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참여, 몰입을 강조한다. 최근 알트스쿨이나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적인 실험학교 모델들도 교사의 강의나 전달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생주도, 학생 참여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 없이 학습자원이거나 모듈을 학생 개인의 흥미, 필요, 이력에 따라서 개별 선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학습(Hyper-personalized Learning)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를 행위자로서 성립시키는 것은 무한히 열린 개방적 선택이 아니라, 맥락에 적합하게 자신의 숙고와 성품을 드러내고 연출(self disclosure and Self-enactment, Oakeshott, 1979)하는 지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Student Agency’를 위해서 활동이나 몰입(engagement)을 강조하려면, 학생의 주관적, 심리적 흥미에 따라 활동을 구성하려 하기보다, 학습자가 정말 배우고 있다는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움의 계기들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주도성은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주요 추진 배경에도 소개되고 있는, 한마디로 뜨는 개념이다. 그러나 학습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핑계삼을 수 없는 근본적인 자기 활동이라고 보면, 교육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 주도성은,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주도하는 것이어야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활발한 외면적 동작을 표출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아야 하고, “교사 앞에서 상대자로 선” 학생이 교사로부터의 배움을 열망하는 주도성이어야지, 배움의 가장 중요한 계기인 교사를 도외시하는 주도성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고교학점제 추진 종합계획.
 남미자 외(2021).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서울: 학이시습.
 Oakeshott, M.(1979). On Human Conduct. Clarendon Press.
 OECD 2030 projects(2018)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2021. 08. 11 인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2019).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student-agency/Student_Agency_for_2030_concept_note.pdf (2021. 08. 11 인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최근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적이 있는데 그후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정되고, 지속가능성보다 녹색성장이 더 상위개념으로 법체계가 잡히는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사회, 정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패러다임인데 비해 녹색성장은 미시적, 전략적, 친시장적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김병원, 2012).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는 정책방향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9월 24일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도 이러한 역전관계는 법령체계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보건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전히 환경부장관(예전 기본법에서는 대통령자문위원회였던 것이 개정 후 변경) 소속인 반면,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녹색산업 등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성(nachaltigkeit)은 생태학적 개념으로 출발했다. 독일의 산림학자 칼로비츠(Hans Carl von Carlowitz, 1645-1714)가 숲생태계의 작용, 과정, 기능, 생산이 미래에도 유지되는 것을 가리키며 처음 쓴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용어가 현대에 들어서 국제적인 환경관련 문건에서 주로 채택되다가, 1987년 세계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당시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land report>로 더 잘 알려져 있음)에서 폭을 넓혀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안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2007년 제정) 제 2조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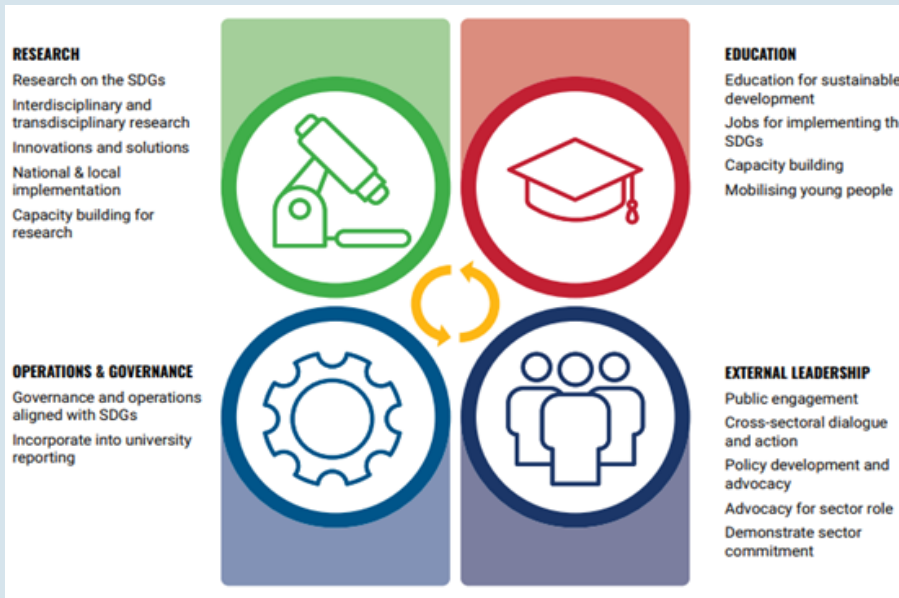


[그림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19개 세부목표 및 236개 지표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은 꼭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환경, 문화의 영역을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UN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는 환경의 문제인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생태계, 에너지, 물과 위생 등도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퇴치, 기아해소,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평화와 정의, 그리고 산업 및 경제성장과 관련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혁신과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교육에 있어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이 17개의 하위 목표 안에 네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으로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모두 지향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4-1 세부지표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한다"로서, 이를 위해서 국가는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교육형평성 확대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3은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로서 이를 위해서 고등기회 확대와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SDGs의 모든 목표를 위해 교육기관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SDGs와 관련한 연구, 학제간 접근, 국가 및 지역사회에 연구결과 적용, 공공정책 의사결정에의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협력 등 연구, 리더십, 조직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SDSN, 2020).



[그림2] Over view of university contributions to the SDGs (from[1])

2018년 이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약속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뒤쳐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endeavour to 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잠재력 자체를 초점으로 삼는 교육은 이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참고문헌

김병원(201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147-163.
김화임(2015).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1). 453-278.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
SDSN(2020).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A GUIDE FOR UNIVERSITIES, COLLEGES, AND TERTIARY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city2city.network/accelerating-education-sdgs-universities-guide-universities-colleges-and-tertiary-and-higher>)
UN(2018) What does it mean to leave no one behind. [<https://www.undp.org/publications/what-does-it-mean-leave-no-one-behind?>]

교육의 예술적 측면(II):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정신의 자유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다루는 주제는, 흔히들 미학이라고 번역하는 ‘에스테틱’(aesthetic)이다. 에스테틱이 요즘은 상업적 용어로 쓰여서 미용이나 화장술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원을 따져들어가면 감수성, 감각작용(sensation)에 가깝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to kalon’은 에로스(열정적인 사랑)를 쏟을 만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에스테틱(미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바움가르텐의 저작도 “Meditation Philosophicae de Nonnullis ad Poema Pertinentibus”(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기 때문에, 에스테틱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마음의 능력인 감각, 감수성 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Immanuel Kant: 1724-1804]



[Critique of Judgment(1790)]

칸트는 사실 학문을 다룬 <순수이성비판>과 도덕을 다룬 <실천이성비판>, 이 두 권으로 자신의 철학체계 전체를 완성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말년에 제3비판서인 <판단력비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통해서 감성의 능력과 판단력을 다루면서 자신의 철학체계를 완성한다. 그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이 3비판서를 가리켜 '자연과 자유의 종합', 또는 '자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이라고 불렀다. 필자가 보기에 칸트는 자유의 단서, 마음이 가진 능동성의 단서를 감각세계의 아름다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실천이성비판>에서 한 것처럼, 도덕적 행위는 자유의 직접적인 증표이다(증표여야 한다). “최고선과 자유 같은 개념들은, 실천적 근거 위에서 그리고 실천적 사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나 인간존중과 같이 도덕을 성립시키는 개념이 그저 허상일뿐이라면(객관적 실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어떤 도덕적 판단도, 그 판단에 입각한 도덕적 선택과 행위도 허구이고 기만일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자기가 뭔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감지하는 것은 꼭 도덕만이 아니다. 도덕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어렵지만 ‘예쁜 것, 예쁜 짓’을 목격한다. 해지는 저녁노을, 아침에 듣게 된 청아한 새소리, 낙엽태울 때 나는 냄새, 통통한 볼살을 가진 아기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것, 등등... 또는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들 중에서 뭔가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일깨우는 것들이 있다. 처연하게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하계조차 깨알처럼 위치하는 천체의 사진, 하늘을 두조각 낼 듯 내려치는 천둥소리 등등. 이런 것들의 가치는, 대상들을 연구해서 그 안의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라고 해도 여전히 남는 것이다.

앞선 비판서에서 칸트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즉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상상력에 의해서 직관에 주어진 덩어리를 종합하고, 이것을 오성이 제시하는 개념에 일치시켜야만 한다(p.173, 58문단)고 말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는, 가령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의 그림이나, 또는 콩깍지가 낀 연인들처럼, 상상력이 직관에 주어진 덩어리를 종합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할 개념이 없다. 그것은 개념의 사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칸트는 아름다움의 이러한 속성을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표현한다. 미라는 것은, 개별적 대상에만 적용되는 단칭판단(singular judgement)이고(§ 9)이지만(전칭판단이라면 모든 장미꽃은 다 아름다워야 하지만, 단칭판단이기 때문에 이 장미꽃이 예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보편적인 규칙을 대표하는 사례인 것처럼, 예시적 필연성(§ 19), 범례적 타당성(§ 25)을 가진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렇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도(주관적 보편성, § 8; 또는 개념들의 매개에 의존하지 않는 쾌감에만 관련되어 있는 보편적 목소리, § 9), 마치 눈 앞의 물체를 감각할 때 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오성 사이의 미결정, 불특정의 조화(§ 35)를 느끼게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나와 말이 통할 것 같은 지적 존재)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하려 한다. 물론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다. 전달가능성은 이해한 것에는 보장되지만, 앞에서 말한 저녁노을, 거대한 폭포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너 아까 그거 봤지?’ ‘어땠어?’ ‘정말 멋있지 않니?’... 이것뿐이다. 상대방이, ‘아니 못 봤는데?’라거나 ‘그게 뭐 어때서?’라는 반응이 나오면 재빨리 화제를 딴 데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아름다움의 사례들, 칸트가 말하는, 취미판단과 숭고판단, 목적론적 판단의 사례들은, 개념을 통한 전달가능성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주관적 요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칸트의 포인트는, 비록 주관적 요청이기는 해도, 아름다움의 감수성이 그저 한 순간 내 마음에만 머물다가는 일회적 체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무늬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문화 안에는 객관적 이해를 통해서 축적된 학문도 있지만, 아름다움의 관조와 표현도 있고, 숭고의 경험에 대한 전승도 있으며, 심지어 학문의 과정 가운데 매순간 매달리는 우주의 단일성이라는 신비*도 있다. 이런 문화의 요소들은 인간의 마음이 단일하기 때문에 대상에 투영한 단일성들이다.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상에 투영한 자유들이다. 아름다운 것들은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기술자가 나에게 만들어준 선물인 셈이고, 숭고한 것들은, 내가 감각세계에 머물지 않는 정신적 존재라는 점을 일깨우는 계시인 셈이고, 이 거대한 자연은, 계속적인 탐구가 의미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보내준 해독표가 있는 암호들인 셈이다. 만약 이런 주관적 요청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데쳐먹을 궁리밖에 하지 못할 것이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 더 건실하게 살겠다는 희망을 품지 못할 것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 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낸 인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한 것이 이 과목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구절은 어느 대학의 교양강좌가 내건 강의목표이다. 이 과목의 이름은?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이다(<https://itunes.apple.com/kr/course/hyeondae-mullihaggwa-ingan/id605195523?l=en>). 물리학 강의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물며 다른 과목이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앤디는, 독방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이중창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를, 교도소 방송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준다. 노래가 끝날 무렵 흑인 죄수 레드와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진다.

“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노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먼 곳으로부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우리가 갇혀 있는 삭막한 새장의 담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d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ay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in Shawshank felt free.)

”

칸트가 제3비판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영화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마음에 꽃혔을 때의 체험을 도외시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영위하는 삶에 들어있는, 아름다움과 생기는, 그저 얻어걸려 스쳐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 우리 영혼이 딱딱한 질료의 세계에 현시한 무늬들이다. 무늬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거죽의 표현에 각인되고 채색된 장식이다. 예술의 상상, 학문의 추상, 철학의 논리도 결국 그렇게 현실에 새겨놓은 장식들일지 모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식이라는 이유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단서와 계기들이다. 미에 대한 관조, 생에 대한 의지, 완성을 향한 갈망....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CLICK

YouTube 영화 쇼생크탈출 중 피가로의 결혼, 편지의 2중창



[쇼생크탈출(1994)]

The Shawshank Redemption, 1994



참고문헌

Kant, I.(1790). Kritik der Urteils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아카넷.

King, S.(1982). 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

교육의 예술적 측면(III): 교사와 학생, 만남의 기예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지난 호에서 칸트를 통해서 인간에게 예술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다. 오늘은 교육에 들어있는 예술적 측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사-학생의 만남에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범례적 타당성이 들어있다. 범례적 타당성이란, 쉽게 말해 인상파 화가들이 얼추 비슷해보여도 각 작가들이 그 나름의 하나의 모범으로 감지되듯이, 그리고 모네의 그림들도 각 작품이 그 나름의 최상의 이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유일한 사례인데도, 그것에 보편적 의미가 서려있는 것을 말한다.

예술이라는 활동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인류의 대화에서 시의 목소리”(Oakeshttt, 1991)-에서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오우크쇼트는 시의 가장 큰 특성을 이미지를 전달(image-conveying)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image-making)으로 본다. 이미지를 전달하는 일에는 늘 고정된 의미,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있고,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가 비교적 분명하다. 소위 문법과 맞춤법이라는 규칙이 글의 올바름을 검사할 수 있듯이, 행위에도 그런 규칙이 있고, 규칙의 부합여부에 따라서 좋은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가려진다. 반면에 운문은 하다못해 '정가의 기차표를 파고살 때'조차도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시는 확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시의 미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활용하는 쾌감에 있다. 해석의 다양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도록 만드는 시는 훌륭한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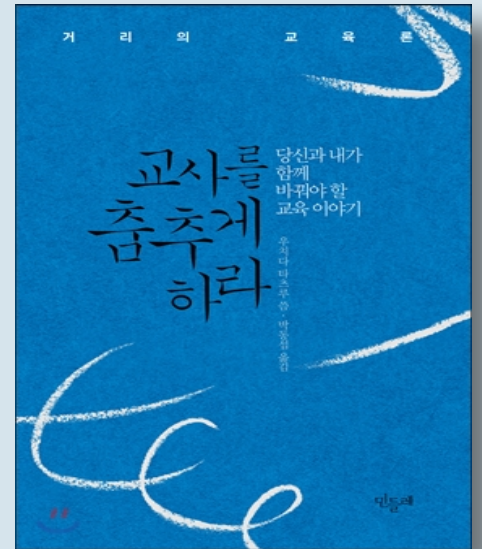
시, 운문의 이와 같은 속성은 지식의 개념이 가르치는 장면에서 교사-학생의 인격으로 내면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예술작품이 그렇듯이, 가장 정형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과학지식조차도 이해하는 사람의 해석가능성이 열려 있고 다른 지식과의 관련 아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하나의 시어가 훌륭한 시 안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틀을 깨고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라).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고하는 대상과 사고하는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되고 있다는 체감을 갖는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하는 일이 예술가의 주된 업무라고 보면, 교육은 가장 시적이고, 예술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주체의 위치를 바꾸어놓는 작업이다.

사실 우리 교육-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지나치게 산문적이다.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식, 교사-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 내용을 가르치기를 주저하고, 교육 내용은 늘 정량적이며, 교육목표는 외형적인 자격조건으로 규정된다. 새로운 해석을 찾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시도할 여유가 없는 편이다. 내용과 목표가 이미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가르치는 방식도 누구나 다 비슷하다. 진부한 질문에 암기한 대답을 들려주는... 그래서 정해진 내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언제나 '교사'이고, 학생은 그 가르침을 건네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가장 재미없고 가장 삭막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곳으로 교육현장을 떠올리는 게 아닌가 싶다. 교육내용을 두고 학생에게 해석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학생은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우겨넣어야 할 기계에 다름없게 된다.

교사와 분리된 교육내용, 교사의 교수활동 이전에 정립된 교육내용 같은 것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수업의 장면에 들어가면 그 내용은 지금 교단에 선 교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학생을 두고 재해석하고 창안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즉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의 이해의 폭과 깊이와는 무관한 교육내용 같은 것은 없다. “지구를 돈다”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모두 다 같은 교수(teaching)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치다가 보기에는 넌센스이다. 이 점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교사에게서 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모두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다.

"원래 비즈니스 세계에선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는 아주 중요한 정보지만, '누가' 샀는지는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만 지불한다면 구매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지요. 이것이 상품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속인적인 것입니다."

(우치다, 2013: 66).



[우치다 타치루 - 교사를 춤추게 하라]

오우크쇼트가 말하는 시의 두 번째 특성은 목적없는 합목적성이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일에는 말과 행위에 다른 목적을 가정하지 않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럴 때 말과 행위는 놀이의 성격을 갖는다. 세르반테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화가, 오르바냐야처럼,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는 '그려보아야 아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일본 교육학자 우치다 타치루 선생은, "말하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이 먼저 있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두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과 듣고 싶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우치다, 2000: 68)으로 표현한다. 오우크쇼트는 이렇게 과정 자체에 대한 일차적 관심,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무엇이 그 과정에서 톱 튀어나와도 그 새로운 것을 기꺼이 과정의 일부로 즐길 수 있는 담대한 태도를 가리켜 교육받은 사람의 자질이라고 말한다.

"텔렘므 수도원*에 소속된 회원 성직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좌우할 규칙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위원리였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이 규칙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라블레는 말한다. 그 까닭은 ... 그들이 도덕적 교류의 언어 속에서 잘 태어나 잘 양육받고 교육받았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수도원에서는(그리고 수도원을 떠나 속세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규칙과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에 사는 행실이 추구되었다."

(Oakeshott, 1975: 78).



[프랑스와 라블레 - 가르강튀아]

* 주)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튀아에 묘사되어 있는 이상

교사와 학생이 만남은 다른 인간관계와 성격이 다르다. 그들이 만나는 이유는 바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이고, 그 성장과 발달은 지금 여기의 세계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지는 독특한 활동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은, 이 만남조차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남 자체가 목적이고 만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면 만남 바깥에서 목적을 끌어들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사전에 결정된 목적, 사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는 만남이 제공하는 풍부한 의미들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그런 것이다. 사전에 규정된 의미를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라 내가 이해못할 것을 만나는 설렘을 갖는 모험이다.

마지막으로 시의 세 번째 특성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개별성에 있어서 유일하게 동등한 관계이다. 그 안에는 위계도 없고, 심판관도 없고, 주재자도 없다. 전달할 이미지가 문제라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도 독점하려 하고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내용에 관해서는 산문처럼 가르쳐야 하기도 하겠지만, 거의 모든 교육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에 이르면, 학생에게 해석의 자유, 관점의 개방을 얻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사람이 놓일 때, 우리는 내가 전달될 이미지의 하나로 전락하지 않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오롯이 서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

"갑자기 새로운 지평이 열린 느낌,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더 광대한 맥락 속에 자신의 위치가 설정되는 경험, 그것이 돌파입니다."

(우치다, 2013: 59).

"배움은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인간이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했던 틀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뛰어넘은 시좌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즉,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몰랐던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같은곳: 60).

”

참고문헌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역(2000). 『스승은 있다』. 서울: 민들레.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역(2012) 『교사를 चु추게 하라』. 서울: 민들레.

Oakeshott, M.(1975). On Human Conduct. Oxford: Clarendon Press. (OHC)

Oakeshott, M.(1991). T. Fuller(ed.).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and expanded edition.

Indianapolis: Liberty Press. (RP)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해외신진연구자 초청 세미나 개최

일시 2022.1. 6.(목) 13:00~17:00

장소 줌(ZOOM)

주제 또래관계에 기반한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연사 김진구 박사

(Radboud University Behavioural Science Institute)



또래관계에 기반한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김진구

Radboud University & University of Turku

Radboud Universiteit



해외신진연구자 초청 세미나

또래 관계에 기반한 생활지도와 학급경영

2022.1.6(목) 14:00~16:00

김진구 박사

<주요 경력>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건국대 교육학 박사

교육부 학교폭력 어울림 개발 및 연수 강사

네덜란드



핀란드



현,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Behavioural Science Institute
박사후 연구원

현, 핀란드 University of Turku
INVEST 박사후 연구원



Zoom

[https://kangwon-ac-kr.zoom.us/j/8](https://kangwon-ac-kr.zoom.us/j/8664534116)

8664534116

회의 ID: 886 6453 4116

미래교육, 학교공간, 그리고 교육재정 전망

2022 **미래교육포럼**

2022 1.20. (목)

14:00~16:10

You Tube



주 관 강원대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단

장 소 YouTube를 활용한 온라인 포럼

강원대 미래형교수학습모델개발지원사업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KYnofX-D4KYdNckppO173w>

문 의 강원대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단 (H.P. 010-2750-8489)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50~14:00	등록 및 개회사	박대식 (강원대 사범대학장)
14:00~14:30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혁신과 과제	정제영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
14:30~15:00	미래학교 공간의 혁신과 창의성	정태진 (이가건축 소장, 퇴계초·중학교 설계)
15:10~15:40	미래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교육재정의 전망	남수경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15:40~16:10	미래학교의 수업혁신: 초중통합학교의 변화	원유림, 김소이 (퇴계초·중학교 교사)

연구석좌교수 초청 특강

성인교육 4.0:

대학의위기와중년의위기극복전략

2022.1.27(목) 10:30~12:00

정용균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연구석좌교수



성인교육 4.0 : 중년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 극복 전략
(울국출판사, 2021)

인류문명을 뒤흔들 키워드는 무엇일까?

필자는 100세 시대라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는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와 사회제도, 산업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성인교육이 해답이다. 어떤 형식이든 성인이 다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는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대학입시는 고등교육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이 공급 주도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수요 주도 시장으로 변하였다. 대학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 참여: **Zoom**

<https://kangwon-ac-kr.zoom.us/j/81350374541>
회의 ID: 813 5037 4541

CLICK